

## 아세안(ASEAN) 3개국 언론의 사회적 갈등이슈 보도에 대한 비교연구\*

심두보(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성혜(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 1. 서론

한국의 지난 세기는 국가형성과 경제개발에 대한 매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내적 지향성으로 인해 한국은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하지만, 세기말에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전역을 휩쓴 경제위기는 정치 경제적 전지구화에 대한 실감뿐 아니라 역설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던져주었다. 때마침 발생한 한류는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레 흘러들어온 일류, 화류 등의 현상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에 대한 인식은 점차로 당위성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 발견”은 사실 한국에서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열풍처럼 번지고 있다.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연합체인 아세안(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그 정치, 경제적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각국

---

\* 이 연구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용역의 자료 일부를 활용했으며, 2009년 한국동남아학회 가을철 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 논문을 꼼꼼히 읽고 생산적인 제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은 동시에 일본, 중국, 한국 등과 자유무역지대(FTA: Free Trade Area)를 형성했거나 형성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들을 포괄하여 일컫는 “아세안+3”라는 명칭은 이제 낯설지 않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의 미디어 및 언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도는 너무도 낮다. 아시아 정치, 경제, 문화 공동체 창출을 통한 공동이익의 실현 등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남아시아의 미디어 및 언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다. 기본적으로 동남아시아에 대한 오랜 무관심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동남아시아 관련 뉴스가 제3자 - 주로, 글로벌 미디어 - 에 의해 제작되고 보도되는 것은 당연시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아세안의 3개 회원국에서 언론이 어떻게 운영되고, 언론의 핵심 역할은 무엇이며, 사회적 현안은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이들 국가의 언론 시스템을 살펴보고, 유사한 주제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분석함으로써 언론규범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동남아시아 3개국은 아세안의 10개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을 가리킨다. 아세안의 10개 회원국 중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그리고 캄보디아의 언론은 여전히 정부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변화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 혹은 해당국의 자국 언론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에서 제외했다. 또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연구자의 한계에 따른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분석을 할 수 없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오랜 동안 발전모델 언론을 충실히 구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최근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국제화 노력이 언론 현실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케이스라는

점에서, 필리핀은 1986년 시민봉기 이후 정권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이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두드러진 나라라는 점에서, 그리고 태국은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동남아시아 언론을 이해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적절한 표본으로 선택되었다. 서구열강의 오랜 식민지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민족주의적 투쟁,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정치발전, 그리고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는 아시아 언론의 가치, 규범 및 역할을 형성하는 토양으로 작용해 왔다. 아시아 언론을 이해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 동남아시아 언론의 일반적 이해

절대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은 20세기 중반에 제국주의 식민 상태에서부터 벗어났다. 이들이 민족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은 험난한 길이었다. 실제로 아시아 국가들은 불교, 유교,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신도 등 다양한 종교적 스펙트럼과 공산주의, 자유 민주주의, 권위주의적 민주주의, 군주 지배 혹은 군부 독재 등의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또한 한 국가 내에도 여러 민족, 인종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민족 분쟁을 경험하였으며, 여전히 새로운 분쟁의 갈등요소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의 국가적 정체성을 창조하기 위해 정치권력들은 일정 정도 시민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 사회적 저발전 상태 속에서의 독립과 국가형성이라는 과제는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권력의 집중과 힘의 남용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했다.<sup>1)</sup>

1) 예를 들어, 1969년에 발생한 인종 폭동을 계기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내 보안법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사회 통합에 매진하고자 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언론은 전반적으로 보아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언론의 자유보다는 언론의 책임에 더 굽은 방점을 찍고 있다. 이러한 언론 통제는 크게 보아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는 억압적인 법 조항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국가는 포괄적이면서 또한 구체적인 법 조항과 그 엄격한 집행을 통해 언론을 통제했다.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의 명제 하에 검열은 일상화되어있으며, 정부에 적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서적, 잡지, 음반 등을 소지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인에 대한 체포, 구속, 구금 등은 비일비재하게 자행된다. 또한 ‘정체불명’ 조직의 언론사에 대한 테러 및 언론인에 대한 폭행은 종종 목인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국가가 직접 미디어를 소유, 운영하는 방식이다. 국영 방송 이외에도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서 민영 방송은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인사, 단체들에 의해 소유,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적 언론 관행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발전 언론론(development journalism)이 있다. 이는 언론을 사회 발전의 도구로 인식하는 것으로, 언론의 주요 기능과 책무를 국가 건설을 보조하고 사회적 조화를 구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저개발국가에서 뉴스는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하므로, 아시아의 언론은 서구적 개념의 언론과는 그 행태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Diaz 1999). 발전 언론을 주장하는 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언론의 사명이 “분열이 아니라 통합”(“integrate, not divide”)이기에(Rosario-Briad 1986: 124), 언론은 정부에 관해 긍정적인 뉴스만을 전달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amaprasad and Ong 1990). 이러

---

(Internal Security Act)과 소요법(Sedition Act)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집회 및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고 있다.

한 주장은 공식화되어, 말레이시아 저널리즘 강령(Canons of Journalism)에 포함된 몇 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Asia Media Forum 2009; 바네지 2005: 249):

- ▶ 언론은 국가 건설 과정에 기여하는 언론의 역할을 인정한다.
- ▶ 언론은 인종간 화합과 국가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야 할 의무를 인식한다.
- ▶ 언론은 사회주의, 인종주의, 종교적 극단주의가 국가의 안녕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 ▶ 언론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 국가의 자산이라는 점을 믿는다.)

정치인들도 지속적으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아키노 전 대통령은 언론에게 분열과 공격보다는 건설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Sim 2006: 579). 말레이시아의 전 총리 마하티르(1985)는 언론은 선출된 제도가 아니라 사적 기업일 뿐이므로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공익적 책임이 있는 정부를 비판하거나 이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발전언론은 언론에 대한 법적인 통제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규범이 되어 그 위력을 발휘했다(Gunaratne 1999).

1970년대 이래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은 서구 언론으로부터 “아시아 경제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구미의 언론과 경제학자들은 아시아의 급격한 경제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틀

---

2) 원문은 다음과 같다.

- It acknowledges its role in contributing to the process of nation-building.
- It recognises its duty to contribute fully to the promotion of racial harmony and national unity.
- It recognises communism, racialism and religious extremism as grave threats to national well-being and security.
- It believes that a credible press is an asset to the nation.

로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 혹은 유교적 직업윤리와 문화적 특질을 주목했다. 서양(개인주의)과 동양(공동체주의)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 속에서 서구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여겨지는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에 대응하는 아시아 고유의 가치를 찾고자 한 것이다. 이들은 집단 지향성, 효도, 근면, 개인보다 공동체와 국가를 우선시하는 태도, 권리보다 의무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 자유보다 책임감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교육에 대한 중시, 권위에 대한 존중 등이 서양보다 아시아에서 더욱 강조되고 또 공유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아시아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분석했다(Pye and Pye 1985). 같은 맥락에서,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 조지 로지(George Lodge)와 아시아연구의 권위자 에즈라 보겔(Ezra Vogel)이 공동 편집하여 1987년에 발간한 책 <이데올로기와 국가경쟁력>(Ideology and National Competitiveness)은 서양과 달리 개인적 성공보다 공동체의 성취를 우선시하는 아시아 사회는 공장과 회사 간의 경쟁으로 특징지어지는 글로벌 경제에서 효율성을 갖는다고 분석하였다(Lodge and Vogel 1987).

이러한 동양과 서양의 가치 차이에 관한 담론은 근대화는 추진하되 그에 수반하여 함께 유입되는 서구문화와 가치관은 막고자 했던 동남아시아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채택되게 된다. 게다가, 서구의 거대 미디어 기업의 전지구적 지배가 확산되고 불균형적인 정보유통이 진전되면서 이들 국가들에게 있어 전통문화와 가치관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들은 서구에서 조금은 경멸적인 함의를 담고 있던 아시아적 가치 논의를 긍정적인 것으로 재 부호화(re-coding)하였다. 즉, “서양의 지나친 개인주의, 방종을 야기하는 서구식 민주주의와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감시견’(watchdog) 언론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서” 화합과 조화에 방점을 두는 아시아적 민주주의와 아시아적 언론 모델을 모색하고 정당화하는 정치기획

(political project)이 이루어진다(Sim 2006). 이를 통해,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 및 언론 통제는 아시아적 가치라는 명제 하에 정당화되었다.<sup>3)</sup>

심석광(Sim Soek-fang 2001)은 동남아시아 정부들이 그들의 사실상 일당 지배(one-party rule)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의견 일치(consensus)”라는 가치를 아시아적 가치 기획에서 중요시했다고 분석했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 헌법은 다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들은 다당제 국가에서 일상화된 다양한 의견의 경쟁 및 여러 정당 정치적 행위를 사회적 “소비”로 볼 뿐이라고 한다. 아시아적 가치 기획은 당시 전지구적으로 진행된 신보수주의의 아시아 버전으로서 권위주의, 신자유주의, 사회적 보수주의를 통합한 내용을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적 가치 기획은 담론의 대척점에 서양의 문화제국주의를 배치함으로써 비판적인 지식인 및 대중을 우군으로 끌어들이 수 있었다. 즉, 이를 문화제국주의에 저항했던 1970년대 NWICO(New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der) 운동의 새로운 버전으로 호도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기획을 통해 정부는 서구의 저속하고 선정적인 문화로부터 아시아의 고결하고 훌륭한 문화를 수호하는 자로 자리매김했다.

이 과정 속에서 일부 언론학자와 언론인들은 정부에 봉사하는 유기적 지식인(organic intellectual)이 되었다. 이들은 정부의 아시아적 가치 기획에 동조하여 미디어도 “아시아화”(Asianize!)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Sim 2001; Sim 2006).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이래 동남아시아에서 개최된 언론학 관련 학술대회들은 아시아적 가치의

---

3) “아시아적 가치” 정치기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1993년, 미국의 외교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법원이 20여대의 민간인 차량에 심각한 재산피해를 입힌 미국 소년에게 태형을 집행한 일은 지나친 방종에 대해 법집행을 엄격히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하는 아시아 정부의 책임감 있는 정치행위로 의미화되어 아시아적 가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언론학 접목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1994년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안 프레스 포럼(1994 Hong Kong Asian Press Forum)은 아시아적 가치와 언론과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최초의 국제 학술대회였다. 이 학술대회는 홍콩에 자리한 프리덤 포럼 아시안 센터(Freedom Forum Asian Center)와 홍콩의 외신기자 클럽(Foreign Correspondents' Club of Hong Kong)이 공동주최하였으며, 100명 이상의 언론인, 학자, 정책 입안자, 각국 정부 관리들이 참석했다. 이 학회에서는 당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정치지도자들이 강조하던 아시아적 가치를 아시아의 언론이 반영하고 있는지? 아시아적 가치란 무엇인지? 아시아 미디어는 아시아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등의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Schidlovsky 1996).

위 학술대회에 자극받은 싱가포르 소재 AMIC(Asia Medi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entre)은 1995년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언론의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 in journalism)를 주제로 해서 총 6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아시아적 가치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진 학자들과 언론인, 정책 입안자들은 서구 언론 모델을 모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언론 자유는 숭고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국가건설 단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에서 언론은 정부를 보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를 비판하는 경우에도 지나치지 않아야 하며, 자국의 문화적 가치, 경제적 조건, 사회정치적 구조 등을 고려한 보도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Masterton 1996). AMIC은 1996년에 싱가포르에서 연례 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아시아적 가치는 계속해서 중요한 의제였다. 이제 아시아에서의 언론 논의에 있어서 국가 경제 발전에 언론이 기여해야 한다는 “발전언론” 중심적 언론관은 “아시아적 가치에 기초한 언론”이라는 보다 문화적으로 본질주의적인 언론관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물론 동남아시아의 모든 언론인들이 아시아적 가치에 기초한 언론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로마노(Romano 1999)의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은 일반적으로 “아시아적 저널리즘”(Asian journalism) 개념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으며, 비판적 정신을 바탕으로 한 탐사보도(investigative reporting)야말로 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언론 개념과 아시아적 가치 기획은 언론관행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쳤음에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1990년대 후반에 진행된 아시아 경제위기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부와 언론인들의 기존 인식을 혼동에 빠뜨렸다. 특히, 언론인들은 속속 드러나는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분히 했는가에 대해 자괴감에 빠졌으며, 이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했다.

경제 위기 이후, 정치 및 경제 자유화의 진전은 아시아의 미디어 지형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국가 소유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의 영향력 아래 있던 미디어 회사들은 시장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광고지면의 확대와 언론의 상업화는 미디어 회사들로 하여금 광고를 획득하고 구독자 숫자를 늘리려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하게 만들고 있다. 정보는 상업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미디어 회사들은 과거보다 능동적인 수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게다가, 시장의 기능은 아시아의 전통적인 정언유착(政言癒着) 관계를 조금씩 균열시키고 있다. 전지구화와 권역화로 인한 새로운 시장의 확대와 정보 기술(ICT)의 발달은 아시아 각국 뉴스매체들이 글로벌 뉴스 미디어와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언론 및 미디어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며,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외국 자본의 유입을 허용하고 있다. 자유언론을 향한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의 열망은 1998년 언론 자유가 상대적으로 일찍 꽃핀 태국, 필리

편 언론인들과의 “동남아 언론연대”(South-East Asian Press Alliance)를 구축하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중국과 베트남의 언론은 각기 공산당의 지배 아래 있으나, 시장 기능의 확대에 따라 언론은 조금 더 자유로운 상태로 변모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 이 논문의 주 연구 대상인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의 언론정책, 언론과 정부의 관계, 주요 신문사의 현황 및 소유구조, 언론환경의 특성 및 최근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3. 아세안 3개국 언론의 구체적 특징

#### 1) 말레이시아 언론의 이해

말레이시아에서 국가에 의한 언론의 통제는 당연시되고 있다. ‘미디어를 통한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1971년 말레이시아는 인쇄매체에 대한 운영허가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1984년 인쇄출판(Printing Presses and Publications Act)으로 그 모양을 구체화하였다. 법에 의거,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떤 형태의 신문사라도 매년 국가로부터 출판허가(License to publish)를 받도록 되어있다. 허가취소에 대해 신문사는 법원에 항소할 수 없으며, 신문사 폐쇄 후 새로운 출판허가를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에 더해, 공식비밀법(Official Secrets Act)과 비방, 중상과 관련된 법안을 동원하여 언론자유는 쉽게 억압되고 있다. 이를 통해 냉각 효과(chilling effect)를 갖게 된 언론인들은 자기 검열의 습성이 배게 된다.

말레이시아의 주요 미디어는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혹은 정부와 관련 있는 인사 및 기관에 의해 소유, 운영되고 있다. 공영 RTM(Radio Televisyen Malaysia) 방송국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최

대 복합 미디어 그룹인 미디어 프리마(Media Prima Berhad)는 여당 연합인 국민전선(BN)에 속한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의 영향 아래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현재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타밀어 등으로 발행되는 30개 이상의 일간지가 있다. 여당연합에 속한 말레이시아 중국인 협회(MCA)는 말레이시아에서 구독 부수가 가장 높은 영자지인 <더 스타>(The Star)를 발행하는 스타 출판(Star Publications Berhad)의 대주주다. 말레이어 신문 중에서는 국민전선(BN)에 속한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가 소유한 우투산 그룹(Utusan Group)이 발행하는 <우투산 말레이시아>(Utusan Malaysia)가 최고의 구독률과 영향력을 자랑한다. 말레이시아인들은 <우투산 말레이시아>를 여당의 기관지로 인식한다.

외국 기업 유치의 필요성에서,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가 본격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 산업단지 ‘멀티미디어 슈퍼 코리도(Multimedia Super Corridor)’의 성공을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여러 차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통제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바네지 2005: 24). 그러나 정부는 온라인에서 보도되는 정보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믿음을 여러 수단을 통해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매체의 기자가 온라인 정보를 인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McAdams 2009). 또한, 정부는 공식비밀법 등의 법령을 동원해 온라인 뉴스 기자와 블로거들을 체포, 구금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적인 온라인 신문 말레이시아끼니(malaysiakini.com)의 존재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반여당 개혁운동 리포마시(Reformasi)의 확산은 말레이시아에서 싹트고 있는 변화를 보여준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9년 말레이시아의 언론자유 등수를 세계 173개국 중 132위에 랭크하고 있다(Reporters without borders 2009).

## 2) 태국 언론의 이해

1932년 이래 끊임없이 군사쿠데타가 발생한 태국에서 여러 군사 정부는 언론 관련 악법과 포고령, 비판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고소, 고발을 통해 언론자유를 억압했다. 또한 언론계의 기득권 세력은 정부와 결탁하여 언론과 방송에 대한 민주적 법제화를 종종 좌절시키곤 하였다(Heuvel and Dennis 1993; Yong 1995). 태국의 언론계에 있어서 국왕과 왕실에 대한 비판과 ‘명예훼손’은 여전히 금기여서, 왕실모독죄가 적용되면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또한 왕실을 모독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조치를 당한다. 1992년 방콕 민주항쟁 이전에는 군부와 불교에 대한 비판도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하지만, ‘인민의 헌법’이라 불리는 1997년 헌법이 39,40,41조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이후에도 군부와 불교에 대한 비판은 기자들의 상당한 용기를 요구하고 있어, 태국 기자들 뿐 아니라 태국 주재 외국 기자들도 자기검열을 강요받고 있다(정문태 2008).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태국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은 태국 언론에 중요한 각성제가 되었다. 선정적인 사진, 연예계 뉴스와 흥미 위주의 기사로 지면을 채웠던 태국의 신문과 잡지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하기 시작했고, 정치와 경제 뉴스를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Sussman 1999). 그러나 경제위기는 미디어 산업 전체 판도를 뒤흔들었다. 1997년 초, 44개를 헤아렸던 태국의 총 일간지 수는 1999년 6월이 되자 25개로 줄어들었다(Ekachai 2000: 440). 당시 3,000명 이상의 언론인과 미디어 산업 종사자가 직장을 잃었다. 잔존한 신문들의 경우도 비용 절감을 위해 지면 수를 경제위기 전에 비해 50% 축소하였으며 언론인들의 봉급은 삭감되었다. 전통적 언론사들 - 직업 언론인들이 투자하여 만든 신문사

혹은 수십 년 동안 전문적으로 신문을 경영한 가족 기업 - 이 떠난 자리에 새로 들어온 것은 정치인 및 재벌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투자 회사들이다(Schidlovsky 1999).

2009년 현재 태국의 일간지 시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32개 타이어 신문, 6개 중국어 신문, 2개 영어 신문. 총 신문 구독자 수는 2백만 명으로 이는 태국 인구가 6천 6백만 명인 점을 고려할 때 높지 않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랏>(Thai Rath) 등 4대 일간지가 전체 신문 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다. 독립적 방송 규제기관인 방송위원회(National Broadcasting Commission)의 설립이 정부의 반대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오래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언론 관련 법조항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9년 태국의 언론자유 등수를 세계 173개국 중 124위에 랭크하고 있다(Reporters without borders 2009).

### 3) 필리핀 언론의 이해

1972년 페르디난도 마르코스(Ferdinando Marcos)에 의한 계엄령 선포 이래 필리핀 언론은 암흑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신문과 방송을 통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언론을 통제했으며, 공보부(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의 신문 발행 허가를 갱신 받지 못한 언론사는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Fernandez 1989). 또한 언론인에 대한 불법 체포 및 감금, 가택연금, 고문, 테러, 협박이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1986년 ‘피플파워’(People Power)로 불린 대규모 군중 시위에 의한 마르코스 정권 퇴진 후 개정된 1987년 헌법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도 통과될 수 없다”는 조항을 통해 언론자유의 원칙을 확고히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언론 상황은 점차 과거로 회귀했다. 정부는 정기 간행물 법, 방송허가 제도

등을 악용하여 언론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매년 수명의 기자가 살해되거나 투옥되는 등 언론보도 환경은 안전하지 않다. 1989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탐사저널리즘센터’(Philippine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PCIJ)가 이곳에서 출발하게 되는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필리핀 탐사저널리즘 센터의 끈질기고 꼼꼼한 탐사보도는 2001년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조셉 에스트라다(Joseph Estrada)의 재임 중 부패, 독직, 공금횡령 등의 사안들을 밝혀내어, 결국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피플파워 II’의 기폭제가 된 바 있다(정문태 2008).

필리핀은 빈부격차가 심하고 신문구독률도 높지 않다.<sup>4)</sup> 따라서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중상류층 사람들은 대부분 영자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일반 서민들은 타블로이드판이나 잡지를 주로 이용한다. 7,100여개의 산재한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필리핀에는 전국적으로 408개의 지역 단위 신문 및 잡지가 발행되고 있다(그 중 일간지는 30개이다)(Valdez 2004: 145-146). 방송국으로는 225개의 텔레비전 방송국, 369개의 AM 라디오 방송국, 583개의 FM radio 방송국이 있으며, 국영인 IBC 텔레비전 방송국과 PBS 라디오 방송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국들은 민영이다. 이렇듯 수많은 언론매체가 재벌 및 귀족 가문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점, 이들의 불균형적이고 선정적인 보도태도는 언론자유에 커다란 그늘을 던지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9년 필리핀의 언론자유 등수를 세계 173개국 중 139위에 랭크하고 있다(Reporters without borders 2009).

4) 2003년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필리핀 인구의 60%가 매일 TV를 시청하는 데 반해, 11%만이 일간지를 읽고 있다고 한다(Valdez 2004: 145).

#### 4. 분석사례,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남아 각국에서 언론은 독특한 변화를 거쳐 왔으며, 이들 국가에서 언론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와 실제 역할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언론을 보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현실에 개입하는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언론이 단순한 정보제공자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해석과 평가자인지 또는 정부의 은밀한 ‘조력자’인지 공식적인 감시자인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국가별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한 다음, 언론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이 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주목하는 큰 사건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은 주로 글로벌 파급력을 가진 미국과 영국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고, 동남아시아와 같은 정보력이 부족한 국가의 언론이 차별성을 갖고 보도하기는 어렵다. 또 개별 국가가 처한 상황이나 우선순위가 모두 다른 상황에서 아시아경제협력과 같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보도도 국가별로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다(김경모·외 2009). 이 연구는 이런 이유로 인해 ①언론이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②정치적 또는 사회적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사건(또는 사안)이고, ③정부의 역할 및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있고, 나아가 ④언론의 규범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를 먼저 조사했다. 그리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유류가격 인상정책’(말레이시아), ‘정치적 소요사태’(태국) 및 ‘광대역통신망 정치스캔들’(필리핀)을 분석사례로 선정했다.

### 1) 분석사례

말레이시아 압둘라 바다위(Datuk Seri Abdullah Badawi) 총리는 2008년 6월 5일 가솔린과 디젤의 가격을 각각 41%와 63% 인상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유류 보조금을 축소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번 유류가격인상은 2006년 3월 가격인상에 이어 2년 만에 단행되는 것으로 인상 폭에 있어 최대 수준이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고, 야당과 국민들의 지속적이며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주유회사와 국경지역 유류 사용자들의 불만은 상당했으며, 언론을 통해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었다.

태국의 정치소요 사태는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왔다. 전통적으로 서민층과 하층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탁신 친나왓 총리는 2006년 9월 발발한 군부쿠데타에 의해 권좌에서 축출된다. 그러나 그해 12월 열린 총선에서 탁신 총리를 지지하는 국민의 힘(PPP)이 승리를 함에 따라 탁신계의 사막 순다라벳 총리 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탁신정부를 축출했던 민주주의민중연대(PAD, 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는 이에 2008년 5월부터 대대적인 반정부 투쟁을 시작했다. 폭력 사태는 그 이후 정부청사로 확대되었고, 마침내 9월 2일 정부군과 시위대의 충돌로 다수가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9월 12일, 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헌법의 공직자 겸임금지 조항을 위배한 사막 총리가 총리직에서 사퇴했으며, 솜차이 웅사왓 총리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그러나 탁신계열 총리에 대한 반탁신계 시위대의 항의는 지속되었고 급기야 국제공항과의

사당이 점거되는 사태로 발전하게 된다. 2008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이에 민주주의민중연대(PAD)의 해산을 명령했고, 아피시트 총리 체제가 출범했다. 2009년의 정치소요 사태는 탁신 총리를 지지하는 독재저항민주주의 연합전선(UDD)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일부 택시기사들이 이 시위에 합세하면서 방콕 시내에 다시 혼돈에 빠졌다. 정치적 소요 사태에 대한 태국 언론의 입장도 탁신 정부에 대한 지지와 반대로 나뉘었고, 이 사태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높았다.

필리핀에서 정치권의 부패 문제는 늘 언론의 관심 대상이었다. 2007년 7월 필리핀의 교통정보부는 국가광대역통신망(National Broadband Network, NBN) 프로젝트를 위한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8월 19일 락손 상원의원은 중국과 필리핀 두 국가 사이에 이미 체결된 계약이 존재하며, 린드로 멘도자 교통 장관과 중국 최대 무선 장비 공급업체인 ZTE사의 부사장이 이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비리의혹 제기 에 대해 대법원은 9월 11일 이 프로젝트의 전면중지를 명령했으며, 9월 18일에는 청문회를 개최했다. 상원 청문회가 시작된 직후인 9월 22일 아로요 대통령은 이 계약의 원천 무효를 선언했고, 청문회는 탄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소강상태에 빠졌던 상원 청문회는 2008년 2월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로자다의 출현으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된다. 로자다는 이번 계약이 이미 2007년 4월 아로요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고 밝히는 한편, 중국 ZTE사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사례비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그의 돌출 발언 이후 정부 측은 허위라며 즉각 반박했고, 카에타노 부정부패척결 청문회 위원장과 락손 상원 의원을 비롯한 반 아로요 진영에서는 대통령의 즉각 정직 혹은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 정부가 연루된 의혹이 짙은 이 문제를 언론은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이 과정에서 친여당지와 친야당지의 갈등도 증폭되었다.

## 2) 자료수집<sup>5)</sup>

말레이시아의 유류가격 인상 정책에 관한 보도를 조사하기 위해 친여당 신문인 <우투산 말레이시아>(Utusan Malaysia)와 친야당지인 <하라카 데일리>(Harakah Daily)를 선정했다. <하라카>는 말레이시아의 제1야당인 범말레이시아 이슬람당(PAS)에 의해 1987년에 창간된 신문으로서, 기본적으로 말레이어를 사용하지만, 8페이지짜리 영어 섹션도 발행한다. 원래 주2회 발행이었던 이 신문이 1990년대 후반에 상당한 인기를 누리자, 정부는 이 신문을 월2회로 바꾸라고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실는 이 신문이 법에 의해 가관이 금지되자, 말레이계 시민들은 <하라카>의 인터넷 판(www. Harakahdaily.net)을 통해 정보욕구를 채우고 있다. <우투산>의 기사는 신문사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했고 <하라카>의 샘플 기사는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을 활용했다. <우투산>의 기사 수집을 위한 자료 검색 기간은 2008년 5월25일부터 6월 25일이었고, <하라카>의 경우 수집 기간은 2008년 2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였다. 1차 수집된 기사 중에서 관련성이 적은 기사나 검색어가 단순히 언급된 경우는 제외했다. 그 결과, 51개의 <우투산> 기사 및 31개의 <하라카> 기사를 최종적으로 분석했다.

태국 정치소요 사태에 관한 보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타이랏>(Thai Rath)과 <푸삿깐 라이 완>(Phuchatkan Rai Wan)의 인터넷 판 기사를 검색했다. <타이랏>은 태국 최고(最古)의 역사,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주요 일간지로서, 2001년 탁신 총리 체제가 등장한 이후 탁신 총리 및 타이락타이(TRTP)당을 줄곧 지지했다.<sup>6)</sup> 1990년

5) 자료수집과 코딩은 태국과 필리핀 출신의 유학생과 말레이시아어에 능통한 대학원생이 담당했다. 코딩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모두 3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으며, 예비분석과 분석 후 결과의 일치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6) 그러나 2006년 이래 탁신에 대한 광범위한 시민적 저항을 확인한 후, <타이랏>은

에 미디어 재벌 손티 림통꾼에 의해 창간된 <푸짖간 라이 완>은 사주와 탁신총리와의 밀착 관계에 따라 2003-2005년 기간 동안 탁신총리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 손티가 반탁신계 민주주의민중연대(PAD)의 지도자로 추대됨에 따라 탁신총리 및 그 지지자들을 반대하는 입장을 택했다. 태국 정치 소요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2007년 중반 당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탁신부부에 대한 부패혐의 기소와 타이락타이(TRTP)당 해산 판결에 있음에 따라, 분석범위를 2007년 5월부터 2009년 4월로 정했다. 인터넷을 통해 관련성이 있는 단어를 다양하게 검색했고, 50개의 <푸짖간> 기사와 98개의 <타이랏> 기사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필리핀의 분석사례와 관련해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러>(Philippine Daily Inquirer)와 <마닐라 불리탄>(Manila Bulletin)의 인터넷판 기사를 검색했다. 마르코스 정권의 부정, 부패, 추문, 독직 등을 폭로하여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획득한 대표적인 신문인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러>는 미국식 ‘객관주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중도 혹은 야당지로 인식되고 있다. <마닐라 불리탄>은 대표적인 친여당지로 현 집권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에 대통령과 하원 의원 등 정치인이 다수 연루된 NBN 스캔들에 관심을 많이 표명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들 두 영자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샘플을 위한 검색어로는 “National Broadband Network, ZTE, President Arroyo, political scandal” 등을 다양하게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두 신문 각각 50건의 기사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부정의혹이 처음 알려진 2007년 8월부터 2008월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했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기사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최종 샘플을 확정했다.

---

탁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바 있다.

### 3) 연구방법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은 언론보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언론의 역할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기사의 유형을 통해 언론이 정보의 단순전달에 치중하는지 아니면 분석과 평가에 더 집중하는가를 추측할 수 있다. 또 정부와 정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정부와 언론의 협력이나 긴장관계를 보여주며, 언론 보도에서 특정한 가치가 발견되는가를 통해 언론이 ‘객관적 관찰자’로 기능하는지 아니면 ‘정치적 옹호자’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에 따라 우선 동남아 언론의 일반적인 보도 관행을 이해하기 위해 ‘기사의 유형’과 ‘정보원의 활용’ 및 ‘객관주의적 보도관행’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태도, 정부관료의 직접인용 비중 및 책임소재의 대상’을 조사했다. 끝으로, 언론과 일반 국민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특정가치의 옹호 여부’를 분석했다.

### 5. 분석결과 및 해석

기사 유형에는 단신기사(straight), 기획기사(feature), 분석기사(analysis), 의견기사(opinion and editorial) 및 인터뷰(interview) 기사 등이 있다. 단신형 기사는 육하원칙(5W1H)에 따라 정보를 주로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기사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사실의 취사선택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의 일부가 축소되기도 한다. 단신기사와 달리 기획과 분석기사는 특정한 해석과 평가를 위해 사실(fact)의 취사선택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또 기획과 분석기사는 단신정보에 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언론은 사안(사건)의 중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런 유형의 기사를 보도한다. 의견기사와 인터뷰 기사 역시 단신기사 중에서 특히 뉴스가치가 높은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사한 사건에 대한 국가간 또는 언론사간 기사유형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표1> 기사유형

구분	단신	의견 기사	기획/ 분석	탐방/ 인터뷰	기타	소계
말레이시아	우투산	86%		2%	12%	100(50)
	하라까	81%	10%	3%	6%	100(31)
태국	푸짖간	74%	22%	4%		100(50)
	타이랏	100%				100(98)
필리핀	인콰이어러	82%	14%	4%		100(50)
	블리틴	86%	8%	4%	2%	100(50)
소계	86%(287)	8%(25)	3%(8)	3%(8)	0%(1)	100(329)

분석의 대상이 된 말레이시아, 태국과 필리핀 언론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기사의 유형은 단신이었다. 필리핀의 경우, 의견기사의 비중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편이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인터뷰/탐방 기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기사 유형에 있어 국가별 차이는 크지 않았고, 언론사간 차이가 더 많았다. 구체적으로, 위의 <표1>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유류세 인상’에 관한 뉴스는 주로 ‘단신형’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말레이시아에서 친정부적인 <우투산>에서 인터뷰 기사가 많고 <하라까>에서 의견 기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통해 이 두 신문의 주안점이

‘정부정책의 홍보’와 ‘유류세에 대한 심층지식’ 제공으로 나누어진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기사유형 만으로 언론이 특정 기사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의제화)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의 <표1>은, 특히 태국의 경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탁신총리를 지지하는 최근의 정치시위를 보도함에 있어 <타이랏>은 의견을 가급적 배제하고 단신형 기사만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푸삿깐>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슈화하고 있으며, 이는 22%에 달하는 의견 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필리핀의 경우, 유력지인 <인콰이어라>와 <블리탄>에서 단신형 기사의 비중은 각각 82%와 86%로 비교적 높았다. 단순정보 전달을 넘어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의 기사도 적지 않았다. <인콰이어라>의 경우 의견기사 비중은 14%였고, 기획/분석 기사도 2건이 발견되었다. <블리탄>에서도 - 비록 빈도는 높지 않았지만 - 의견기사와 기획/분석 기사 비중이 각각 8%와 4%에 달했다.

특정한 기사에는 다양한 정보원이 ‘직접’ 또는 ‘간접’ 인용의 형태로 등장된다.<sup>7)</sup> 그리고 이들 정보원을 통해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려고 하는 한편, 정보원들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려고 한다. 따라서 어떤 정보원이 얼마나 많이 또는 적게 인용되는가를 통해 언론의 역할이 ‘중재자’인지 아니면 ‘개입자’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7) 언론에 등장하는 정보원은 사안에 따라 지나치게 많을 수 있고, 상업적 흥미를 위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정보원도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원의 분석에 있어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정보원’을 의미하는 권위자(cue-giver)를 중심으로 정보원을 파악했다.

<표2> 권위자의 인용 양상

구분	국가/정부	정치인	기업인	사회 단체	시민	언론	기타 (익명)	소계	
말레이시아	우투산	74%	14%	2%	8%		2%	100(50)	
	하라까	60%	26%	7%	7%			100(31)	
태국	푸짖깐	22%	10%	26%		6%	36%	100(50)	
	타이랏	62%		20%	14%	2%	2%	100(98)	
필리핀	인콰이어러	68%	2%	14%	4%	2%	10%	100(50)	
	블리틴	64%	10%	6%		2%	18%	100(50)	
소계		58%(192)	6%(19)	6%(19)	11%(38)	6%(20)	2%(5)	11%(36)	100(329)

위의 <표2>는 이들 세 국가의 언론이 공통적으로 다양한 정보원을 인용하는 가운데 국가기관 또는 정부 관료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태국의 <푸짖깐>을 제외한 모든 신문에서 국가/정부의 비중은 60%를 넘었고, 정치인, 기업인과 사회단체 등이 다양하게 인용되고 있다. 기사는 정보원의 입을 빌어 특정한 시각을 정당한 주장으로 포장하며, 이러한 정보원의 전략적 활용은 오래된 언론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또 비판적인 언론사들이 정치인을 보다 많이 인용하는 경향도 세 국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친야당 또는 중립적 성향이 강한 <하라까>, <푸짖깐>과 <인콰이어러>의 정치인 비중은 각각 26%, 10%와 10%로 그 비중은 친여적 언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가가 운영하는 통신사를 포함해 자국 언론을 인용하는 비중도 태국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위의 <표2>에 따르면 권위자를 인용함에 있어 매체별 차이는 국가별 차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밝혀졌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정부에 비판적인 <하라까>는 친정부적인 <우투산>에 비해 훨씬 많은 정치인을 인용하고 있다. <우투산>은 이와 달리 정부, 기업인과 일반 시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를 통해 정부정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언론사의 입장에 따라 정보원의 인용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은 태국에서도 발견된다. 앞서 밝힌 것처럼 태국의 <푸짖간>은 탁신 및 그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노선을 취한다. 정치적 소요사태를 보도함에 있어 이런 입장은 권위자의 인용에서 잘 드러난다. 보다 보수적인 <타이랏>의 62%에 비해 <푸짖간>의 정부관료 인용 비중은 22%에 불과하다. <푸짖간>은 그 대신 정치인과 사회단체 및 다수의 익명 권위자를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푸짖간>에서 기타 및 익명의 비중은 36%에 달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정치적 소요사태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익명을 요구하는 권위자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 신문이 ‘익명’의 권위자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정치적 소요 사태를 보도함에 있어 <푸짖간>은 적극적인 정치행위자로 기능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원의 전략적 활용은 국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필리핀의 경우, 태국과 달리, 친여당지인 <불리탄>은 중도/비판적 성향인 <인콰이어러>와 비교했을 때 정부관료는 적게 인용하고, ‘익명/기타’에 더 많이 의존했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국식 언론모델의 특징 중 하나로 다양한 의견의 반영과 ‘객관주의적 관행’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많다(Schudson 1995). 그러나 언론의 이러한 ‘객관적 거리두기’ 관행은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증대시키는 한편, 국민들이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언론은 ‘공정하고, 균형 있고, 또한 정의로운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 연구는 이에 아시아 언론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객관주의적 보도관행’이 실제 보도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를 확인했다.

<표3> 언론의 객관주의적 보도관행 여부

신문		다양한 의견 있음	양비론 시각 있음	소계
말레이시아	우투산	14%	12%	100(50)
	하라카	52%	52%	100(31)
태국	매니저	14%	12%	100(50)
	타이라스	49%	49%	100(98)
필리핀	인콰이어	18%	18%	100(50)
	블리틴	16%	16%	100(50)
소계		36%(117)	28%(93)	100(329)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상업화된 언론은 가능하면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양비론’ 또는 ‘형식적 다양성’과 같은 전략적 관행을 발전시켜 왔다(Tuchman 1978). 그러나, 위의 <표3>에서 드러나듯, 언론의 이러한 관행은 부분적으로만 발견된다. 즉 필리핀에서 이러한 관행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낮았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도 일부 언론에서만 확인된다. 말레이시아의 친여당지인 <우투산>에서 의견의 다양성과 양비론 시각은 10%대로 극히 낮은 반면, <하라카>에서 그 비중은 각각 52%대에 달했다. 이 결과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발전모델은 친여당 신문에 더 적극적으로 채택되고, 친야당지는 미국식 객관주의 모델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미국식 자유주의 모델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한 태국에서 객관주의적 보도양상은 말레이시아와 정반대로 나타났다. 즉 태국에서 ‘객관주의적 관행’은 <타이랏>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부분적으로 이는 <타이랏>의 경우 단신형의 기사를 많이 실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 <푸짖깐>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자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비론적 시각’ 또는 ‘상반된 의견’의 비중이 <타이랏>보다 낮다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획득하고 상업적 논리를 중시하는 국제적 언론 관행은 필리핀에서도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다. 즉 두 신문에서 의견의 다양성과 양비론적 시각의 비중은 각각 18%와 16%에 불과했으며, 부분적으로 이는 ‘정치적 스캔들’이라는 사안의 특수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를 고려할 때, 동남아 언론에서 객관주의적 관행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특정한 사안의 성격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다. ‘기사의 유형, 권위자의 인용 및 객관주의 보도 양상’이 언론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준다면, 다음에 나올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태도’는 언론과 정부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자료다.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크게 언론이 정부에 종속된 경우, 언론이 독자적 제4부로서 정부를 압도하는 경우 및 언론과 정부가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정부가 언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더 잘 드러나며, 분석사례는 이에 잘 부합한다.

&lt;표4&gt;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태도

신문	우호/협조적	비판/적대적	중립적	기타 (판단불가)	소계	
말레이시아	우투산	60%	22%	10%	8%	100(50)
	하라카	13%	65%	16%	6%	100(31)
태국	푸삿간	8%	36%	56%		100(50)
	타이랏	2%	59%	39%		100(98)
필리핀	인콰이어러	12%	56%	32%		100(50)
	블리턴	8%	48%	44%		100(50)
소계	15%(50)	48%(159)	35%(114)	2%(6)	100(329)	

위의 <표4>를 통해 대부분의 언론사가 정부로부터 상대적 독립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태도의 평균 비중은 48%로 우호적인 태도인 15%를 압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를 제외할 경우 중립적 비중 역시 40%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 내에서 언론사별 차이는 이 보다 더 두드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말레이시아의 <하라카>에서 비판적/적대적으로 분류된 기사의 비중은 64.5%에 달했고, 이는 친야당적인 이 신문의 입장 과도 일치한다. 친여당지인 <우투산>은 이와 달리 압도적인 비중(60%)으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두 신문 모두 ‘중립적’인 보도 태도의 비중은 각각 10%와 16.1%에 불과했다. 말레이시아 언론에서 ‘발전모델’이 언론의 입장과 보도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위의 <표4>는 또 태국에서도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타이랏>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적대적 보도태도의 비중은 59%로 친야당지인 <푸짖칸>의 36% 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푸짖칸>에서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은 물론 ‘중립적’ 입장의 비중이 각각 8%와 56%로 <타이랏>의 2%와 3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필리핀의 <인콰이어러>와 <블리틴>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적대적’ 보도태도의 비중은 각각 56%와 48%로 상당히 높았다. 정부에 대한 협조적인 보도태도도 일부 발견되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은 높지 않다. 대통령과 정치인 다수의 비리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중립적’ 보도태도의 비중도 32%와 44% 정도에 불과했다. 그리고 <인콰이어러>의 경우 정부의 비판에 있어 보다 전략적인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드러났다. 집권세력과 긴밀한 것으로 알려진 <블리틴>에서도 비판적 기사의 비중은 48%로 비교적 높았지만, ‘중립적’ 비중이 42%에 달해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언론과 정부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항목으로 ‘책임소재의 분포’를 들 수 있다.

&lt;표5&gt; 책임소재의 분포

신문		문제당사자	구조적문제	정부책임	기타	모름	소계
말레이시아	우투산	72%	8%	14%		6%	100(50)
	하라까	16%	10%	71%		3%	100(31)
태국	푸짖깐	28%	6%	18%	8%	40%	100(50)
	타이랏	53%	20%	3%	12%	12%	100(98)
필리핀	인콰이어러	58%	2%	40%			100(50)
	블리틴	90%	4%	6%			100(50)
소계		55%(181)	10%(33)	19%(63)	5%(16)	11%(36)	100(329)

위에서 논의한 바 있듯이, 말레이시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언론에 의한 과도한 정부비판을 자제시키고, 그 대신 사회적 책임과 통합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언론이 ‘문제의 책임소재’를 주로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를 확인했다. 정부의 개입과 무관하게 많은 문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언론의 특성이 실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위의 <표5>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 따라 ‘책임’을 묻는 대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과,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말레이시아의 <하라까>와 태국의 <푸짖깐> 및 필리핀의 <인콰이어러>에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비중은 각각 71%, 18%와 40%에 달했다. 반면, 문제당사자를 지목하는 비중은 대체로 친여당지 혹은 보수지에서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우투산>과 태국의 <타이랏>에서 그 비중은 각각 72%와 53%였다. 그러나 개별 국가에서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보도 사안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나타낸다.

태국의 경우, 조사한 두 신문 모두에서 이번 소요의 책임소재는 다양하게 지목되고 있다. <표5>의 이런 결과는 부분적으로 두 신문의 ‘기사유형’이 달랐다는 것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즉 단순사건

보도의 경우에 자주 등장하는 행위자는 ‘시위대’일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문제당사자’로 분류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타이랏>의 경우 ‘구조적문제’를 지목하는 비중도 높았고, ‘기타’와 ‘알 수 없다’는 비중도 12%대에 달했다. 그리고 ‘정부책임’의 비중이 18%에 달했던 <푸짖간>에서 ‘알 수 없음’의 비중이 40%에 달하는 것을 통해 <푸짖간>의 정치적 입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필리핀의 사례처럼 정치부패와 관련된 사건은 ‘책임소재’가 비교적 분명한 사안에 해당한다. 위의 <표5>에서도 이 점은 확인되고 있으며, ‘알 수 없음’에 해당하는 기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언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책임소재’는 다르게 조명되고 있다. <인콰이어러>에서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은 ‘문제당사자’(58%)와 ‘정부’(40%)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집권당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불리탄>에서 책임소재의 90%는 ‘문제당사자’로 이 문제를 집권세력 전체로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읽혀진다. 즉 <불리탄>에서 정부책임의 비중은 6%에 불과했고, 이는 40%에 달했던 <인콰이어러>와 상당한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동남아 언론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국민의 관계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흔히 언론은 사회 현상과 국민의 의견을 단순히 반영하는 ‘거울’(mirror)이라는 입장과 특정한 사안을 이슈화하고 국민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구성자’(constructor)의 양면을 갖는다. 미국식 객관주의 모델에서는 언론의 거울 역할이 강조되고, 발전모델에서는 언론의 리더십이 강조된다. 다음의 <표6>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되었다.

&lt;표6&gt; 가치 지향성 여부

신문	인권/자유	질서/안정/통합	애국심	국민계몽	여론수렴	소계	
말레이시아	우투산	8%	8%	4%	6%	6%	100(50)
	하라까	10%		3%		7%	100(31)
태국	푸짖간	4%	4%	2%	12%		100(50)
	타이랏		6%	4%	10%		100(98)
필리핀	인콰이어러	28%	22%	20%	19%	10%	100(50)
	불리틴		34%	6%	2%	2%	100(50)
소계	7%(23)	12%(40)	6%(21)	9%(29)	3%(11)	100(329)	

제4부로서 정부를 ‘감시하는’ 언론(미국식 모델) 또는 국가발전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는 언론(발전모델)에 대한 평가는 특정한 기사에서 어떠한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제4부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자유, 인권, 다양성’과 같은 가치들이 더 부각되고, 국가와 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는 경우 ‘통합, 안정, 질서’ 등의 가치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는 언론의 경우 ‘국민의식을 계몽’하려고 하는 반면, 정부를 비판하는 역할에 머물 경우 ‘여론수렴’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다. <표6>의 결과는 동남아 언론에서 이러한 특성은 부분적으로만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언론모델에 있어 더 중요한 변수는 ‘국가’가 아닌 ‘언론사의 특성’에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말레이시아에서 발전모델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투산>에서 질서/안정/통합이 발견된 비중은 8%로, 또 국민을 계몽하려는 기사의 비중도 6%로 이런 기사가 전혀 없는 <하라까>와는 대조적이었다. 반면, <하라까>에서는 인권/자유를 보다 강조한다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말레이시아에 비해 미국식 모델이 보다 보편화된 태국에서도 ‘국민계몽’을 주장하는 기사의 비중은 비교적 높았고, ‘여론

수렴'을 요구하는 기사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또 태국 언론의 경우, 특정 가치를 지향하는 데 있어 정치적 성향의 차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필리핀의 <인콰이어러>의 경우 '인권/자유'를 옹호하는 비중은 아주 높게 나타났고, '여론수렴'을 요구하는 비중도 비교적 높았다. 이를 고려할 때, 동남아 언론에서 발전주의 모델은 언론의 기본 철학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언론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식 모델이 동남아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 6. 결론 및 함의

정치적 불안과 인종적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신문출판물법 등을 통해 언론과 출판물에 대해 연간 출판허가를 갱신하지 않거나, 검열 혹은 출판금지 명령 등을 통해 언론에 대한 통제를 정당화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남아시아 언론은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증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역할 대신, 정부 정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대국민 설득에 주력하는 '보조자'의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언론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법적 압력은 자연스럽게 비판적이고 탐사적인 언론에 대한 '냉각효과'(chilling effects)를 가져왔고, 시민들 역시 이를 큰 문제로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997년의 경제위기는 동남아시아 각국의 정치, 경제 뿐 아니라 언론계의 변화를 추동하였다. 우선, 언론이 국내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감시견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은

개별 언론인들의 직업적 반성을 이끌어내었다. 게다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직시할 거부할 수 없는 글로벌화의 위력과 인터넷의 확산은 언론의 국제적 규범에 대한 재인식으로 나아갔다. 또한 미디어의 상업화와 집중화는 언론과 정부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복잡한 현실 속에서 동남아시아 언론의 전통적인 발전언론 혹은 아시아적 가치는 어떻게 발현되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 연구는 이에 국가별 분석사례를 선정, ‘기사유형, 권위자인용,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태도 및 가치지향성’ 등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3개국에서 정치적 성향이 다르거나 독자층이 구분되는, 그리고 대표성을 띄는 언론사 2개를 각각 분석대상으로 결정했다. 분석사례는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고, 언론의 중재역할 또는 환경감시 기능을 유추할 수 있는 사건이나 이슈를 택했다. 그 결과, ‘유류세 인상법안’(말레이시아), ‘2009년 정치소요 사태’(태국) 및 ‘로비 스캔들’(필리핀)이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된 기사의 수가 많지 않았고 (국가별로 평균 100개 정도) 분석사례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발견되었다. 분석을 통해서 유추된 첫 번째 공통점은 단신, 기획기사, 인터뷰기사, 칼럼 등 다양한 형태의 기사유형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를 통해 최소한 언론의 보도양식은 국제적인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언론의 상대적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자유다원주의 사회는 물론 정부가 언론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국가에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는 흔하게 발견되었다. 언론은 또 정보원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내용분석이라는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 정부비판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체제 위협적’인 사안이 아닐 경우 정부에 대한 비판은 어디서나 용인되고 있었다.

세 번째 공통점으로는 해당 매체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보도양상이 다르고, 이는 언론의 ‘정파성’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언론의 정파적 접근은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발견되었고, 언론은 이 과정에서 ‘담론을 통한 설득’ 작업을 담당했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가 비교적 잘 보장된 필리핀에서 친여당 매체인 <불리탄>은 정치권의 부정의혹이 ‘집권세력’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희생양 만들기’ 전략에 아주 충실했다.

넷째로 언론이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보편적 현상으로 발견되었다. 물론 분석사례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겠지만 ‘정부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독점적 목소리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반 시민이나 사회단체 및 ‘기타’에 속하는 다양한 권위자들이 인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듯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하는 것은 언론의 자율성 확대와 매체의 증가에 따른 ‘담론경쟁’과 무관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로 언론이 스스로를 ‘엘리트’로 규정하면서 국민을 계도하거나 공동의 이해를 위해 ‘질서와 안정’을 강조하는 모습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언론이 여전히 주목하는 권위자는 ‘정부와 정치인 또는 기업인’과 같은 엘리트 그룹이었다. 또 비록 그 빈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이 ‘안정과 질서’, ‘애국심’과 같은 가치를 옹호하는 기사를 싣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식 언론모델과 상업주의적 언론규범의 국제적 확산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이다. ‘발전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도 집권세력과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언론사는 많은 정부비판 기사를 쏟아냈으며,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기 보다는 ‘중간자’의 입장에서 가치중립적인 입장

을 취하려는 모습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견되었다. 즉 말레이시아 언론에서 ‘국민적 긍지와 애국심’의 비중이 특별히 높지 않았고, 태국과 필리핀 등에서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사도 특별히 많지 않았다.

이러한 다양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별 차이도 존재했다. 말레이시아 언론은 아직은 아시아적 가치를 바탕에 둔 ‘발전 모델’이 대세인 듯 보이며, 태국과 필리핀 등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을 당연하게 여기는 ‘미국식 모델’을 선호하는 듯이 보인다. ‘다양성’과 ‘객관주의’ 원칙도 점차로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공공저널리즘이나 발전모델에서 주장하는 ‘특정 가치의 적극적인 옹호자’로 기능하는 언론의 모습이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 발견되었다. 즉,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인권과 자유’가 적극 강조되기도 했고,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정과 통합’을 부각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인터넷과 미디어의 상업화에 힘입어 언론의 외적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 의한 언론통제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으나, 그 폭력성은 조금씩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즉 광고주와 언론기업을 통한 간접적인 정부의 간섭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언론사와 대기업간의 유착적 공생관계는 확대되고 있었다. 그 결과, 태국과 필리핀 등에서는 지나친 선정성과 당파성의 폐해가 발견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동남아시아 언론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대표적인 언론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핵심 인사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 방법론으로 문헌자료 수집, 분석과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에 의존한 연구의 한계는 존재한다. 언론보도에 대한 분석에서도 크고 작은 아쉬움이 남는

다. 무엇보다 먼저 분석사례가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분석항목을 적용했다는 데서 분석의 엄밀함이 부족했다. 또 분석 기사량이 많지 않았고, 단순 내용분석만 실시함으로써 각국 언론의 실질적인 차별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실제 해당 기사를 쓴 기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가 유추한 해석이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지 못한 점도 이 연구의 약한 고리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른 법이 없다’는 말처럼 이 연구가 찾아낸 작은 성과들에서 위안을 찾고자 한다.

**주제어:** 아시아공동체, 발전언론모델, 아시아적 가치, 언론의 규범적 가치, 언론의 상업화

#### <참고 문헌>

- 김경모·김성해. 2008. “아시아공동체와 언론보도.” 한국언론재단 국제세미나 발표문
- 바네지, 인드라짓. 2005. “인터넷과 아시아의 민주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아시아의 인터넷, 정치, 커뮤니케이션』 (인드라짓 바네지 편저, 황용석 옮김, pp. 1-34),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산토스, 버젤. 2005. “인터넷과 필리핀의 민주주의: 그 빈약한 관계에 대해서.” 『아시아의 인터넷, 정치, 커뮤니케이션』 (인드라짓 바네지 편저, 황용석 옮김, pp. 299-338),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정문태. 2008. 『The News 아시아를 읽는 결정적 사건 9』 (쉐일라 코로넬 외 지음, 오귀환 옮김, pp. 245-247)
- 코로넬, 쉐일라. 2008. “피플파워에 쫓겨난 로빈후드 대통령.”

- 『The News 아시아를 읽는 결정적 사건 9』 (셰일라 코로넬 외 지음, 오귀환 옮김, pp. 12-40)
- Asia Media Forum. 2009. "Eye on Ethics". <http://www.eyonethics.org/journalist-code-of-ethics-in-asia/canons-of-journalism-malaysia/> (검색일: 2009.07.07).
- Diaz, P. 1998. "The 'new edge' in Asian journalism." *Media Asia* 25(4), pp. 188-92
- Ekachai, Daradirek. 2000. "Thailand." *Handbook of the media in Asia*, (ed. Shelton Gunaratne, pp. 429-461), London: Sage
- Fernandez, D.G. 1989. "Philippines." *Press systems in ASEAN states*, (ed. A. Mehra, pp. 57-84), Singapore: AMIC
- Freedom House. 2009. [http://www.freedomhouse.org/uploads/fop08/FOTP2008\\_WorldRankings.pdf](http://www.freedomhouse.org/uploads/fop08/FOTP2008_WorldRankings.pdf) (검색일: 2009.07.07).
- Gans, H. J. 1979. *Deciding what's news :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ew York: Pantheon Books.
- Gunaratne, Shelton A. (ed.). 1999. *Handbook of the media in Asia*. London: Sage
- Ha, Minh Hue. 2004. "Vietnam." *The Asia Media Directory*.(ed. Werner vom Busch, pp. 207-219), Singapore: Konrad-Adenauer-Foundation Singapore
- Heng, Russell Hiang-Khng. 2001. "Media Negotiating the State: In the Name of the Law in Anticipation." *Sojourn: Journal of Social Issues in Southeast Asia*, Vol. 16.
- Heuvel, Jon Vanden & Everette E. Dennis. 1993. *The Unfolding Lotus: East Asia's Changing Media*. New York: Freedom Forum Media Studies Center
- Lent, J.A. 1982. "Philippines." *Newspapers in Asia* (ed. J.A. Lent, pp.

- 267-280), Hong Kong: Heinemann Asia
- Lent, J.A. 1978. "Press freedom in Asia." *Gazette* 24(1), 41-60
- Lodge, G. and Vogel, E. 1987. *Ideology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 Markham, J.M. 1974. "Thailand's press plays wider role." *New York Times*, (June 2), p. 19
- Masterton, M.(ed.). 1996. *Asian values in journalism*. Singapore: AMIC
- McAdams, Mindy. 2009. "How press censorship works".  
<http://mindymcadams.com/tojou/2007/how-press-censorship-works/> (검색일: 2009.0707)
- Mitchell, J.D. 1971. "Thailand." *The Asian newspapers' reluctant revolution* (John Lent, ed. pp. 210-233),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 Mitton, R. 1998. "On the attack: Thai media go for blood at home and abroad." *Asiaweek* (Dec. 25).
- Panol, Zeny Sarabia & Yen Do. 2000. "Vietnam." *Handbook of the media in Asia* (ed. Shelton Gunaratne, pp. 462-486), London: Sage
- Philippine Daily Inquirer. 2009. <http://www.inquirer.com.ph/history.asp>  
(검색일: 2009 07.20)
- Pye, L. & Pye, M. 1985. *Asian power and politics*. Cambridge: Belknap Press
- Ramaprasad, J. & Ong, J. 1990. "Singapore's guided press policy and its practice on the fourth page of the Straits Times." *Gazette* 46, pp. 41-56
- Reporters without borders. 2009. <http://www.rsf.org/en-rapport78-Singapore.html> (검색일: 2009.07.18)
- Romano, Angelo. 1999. "Development journalism: State versus

- practitioner perspectives in Indonesia.” *Media Asia* 26, pp. 183-191
- Rosario-Braid, F. 1983. “A development-oriented communication approach.” *Media Asia* 13(3), pp. 123-7
- Schidlovsky, J. 1996. “Is there an Asian model of journalism?” *Under pressure: Asia and Pacific media*. Sydney: Australian Centre for Independent Journalism
- Schidlovsky, J. 1999. “Hard times for Thai journalists.” *American Journalism Review* 21, pp. 18-19
- Schudson, M. 1978. *Discovering the news :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newspapers*. New York: Basic Books.
- Sim, Soek-fang. 2001. ‘Asian values, authoritarianism and capitalism in Singapore’, 『Javnost』 8(2), 45-66
- Sim, Soek-fang. 2006. “Obliterating the political: One-party ideological dominance and the personalization of news in Singapore 21.” *Journalism Studies* 7(4), 575-592
- Schudson, M. 1995. *The power of new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ussman, L.R. 1999. *Press freedom 1999: News of the century*, New York: Freedom House
- Tuchman, G. 1978. *Making news :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Valdez, Violet B. 2004. “Philippines.” *The Asia Media Directory* (ed. Werner vom Busch, pp. 143-178), Singapore: Konrad-Adenauer-Foundation Singapore
- Yong, T. 1995. “Thailand: Media's growing influence.” *Nieman Reports*, 49(4).
- (2009. 12. 20 투고; 2010. 1. 16 심사; 2010. 2. 25 게재확정)

<abstract>

## Comparative Research on the Reportage of Social Conflict Issues in the Newspapers of 3 ASEAN countries

SHIM Doobo (Sungshin Women's University)  
& KIM Sunghae (Korea Press Foundation)

Korea's past century can be summarized as one which focused on nation-building and economic development. By this internal orientation of national power, Korea could not have leeway to properly promote cultural exchanges with its neighbors. The economic crisis in the last decade, however, provided us with not only the chance to appreciate the reality of political economic globalization but also the necessity to link further with other Asian countries. Nevertheless, our understanding of media systems and journalism situation in ASEAN countries is very low. Against this backdrop, this research is to do research on the media management, journalism performance, and core values of journalism in Malaysia,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According to our analysis, 'development journalism' appears to be dominant in Malaysia, while 'American model' which stresses press freedom and political commentary is being preferred in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In particular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governmental interference in

the media has gradually been reduced while collusive ties between the media and businessmen expanded. As a result of such diffusion of neo-liberalism in the media, gonzo journalism is being spreaded in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while debates on press freedom and social responsibility is in progress.

**Keywords:** Asian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ism, Asian values, journalistic value, media commercialism